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다음 각 채권과 채무에 대해 연 6분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자지급 및 이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고 가정하며 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개인 명의로 용도를 밝히지 않고 회사원인 친구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의 차용금채무
- ㉡ 부동산중개업자 A가 B에게 건물을 매수해 오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수대금 용도로 B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대여금채권
- ㉢ 당구장을 경영하고 있는 A가 당구장에 사용할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노점상 B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
- ㉣ A가 과수원에서 수확한 포도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고객 B에게 판매한 경우의 포도판매 대금채권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2.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리인의 표시가 없는 당사대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대리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외에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판례에 의하면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③ 채권자의 지점에서 거리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 ④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더라도 그 보증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 ⑤ 상인 간의 상행위인 확정기매매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상법상 운송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운송주선인이 아니다.
- ③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운송주선인이 송하인의 지정가액보다 염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주선인의 이익으로 한다.
- 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채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4. 상법상 당사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인은 선의이며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다른 특별시·광역시·시·군이라고 가정함)

- 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하자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 후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즉시 하자통지 후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목적물을 보관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 ④ 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매목적물이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고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 ⑤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인 상인이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상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상인의 상호는 영업내용 및 영업주의 실질과 일치하여야 한다.
- ③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 ⑤ 상인의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이지만 등기한 상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6. 상법상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합자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회사가 아닌 상인은 상호를 가등기할 수 없다.
- ⑤ 타인이 가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7.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영업양도계약에 있어 양수인은 반드시 상인일 필요가 없다.
- ② 영업양도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④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의 채무자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에게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⑤ 판례에 의하면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8.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가 운영하는 전기제품 판매점의 점원인 B가 그 판매점에서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였던 C의 사무실을 찾아가 A의 허락없이 C로부터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 C의 B에 대한 외상대금의 변제행위는 유효하다.
- ② 영업주로부터 지배인으로 선임된 A가 지배인 선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B와 영업주의 영업상 거래를 한 경우 A와 B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 ③ 甲회사의 공동지배인 A, B, C는 D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공동으로 수령한 후 1개월 뒤 D가 B에게만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甲회사에 대해서는 잔금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어도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있다.
- ⑤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9. 상법상 주식회사의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종류에 따라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 발행된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다른 종류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 ⑤ 회사가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청구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10. 甲주식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乙주식회사를 설립하여 乙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乙회사는 甲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甲회사는 乙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甲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있으면 그 주주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 乙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甲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甲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 甲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을 결의한 때에는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등의 사항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11.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양도할 수 없다.

12. 상법상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명의차용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주주는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회사를 위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감사가 선임된 회사에서 주주가 대표소송의 제기에 앞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 ⑤ 대표소송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는 물론 청구의 인락이나 화해도 할 수 없다.

13.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발기인은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 ② 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인수된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4.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
- ②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⑤ 합명회사의 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는 물론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5.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면서 설립등기사항인 것은?

- ① 상호
- ② 자본금의 액
-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④ 회사의 공고방법
- ⑤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6. 2017년 1월 5일에 설립등기를 마친 비상장주식회사인 甲회사는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甲회사 주주 A는 2017년 7월 15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B에게 양도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간주한다.
- ② 판례에 의하면 A가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주식양도는 당사자인 A와 B 사이에 효력이 없다.
- ③ 甲회사가 주식양도시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A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와 B 사이의 주식양도는 甲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 ④ A가 甲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甲회사가 20일 내에 이를 거절한 때에는 A는 그 거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甲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A가 甲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한 경우 이사회는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지정하고 A와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7. 甲회사는 2017년 11월 21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乙회사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甲회사와 乙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임)

- ㉠ 甲회사의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가진 주주는 2017년 10월 2일 이사에게 정관변경의 건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 ㉡ 甲회사의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가진 주주는 2017년 11월 17일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전자문서로 청구할 수 있다.
- ㉢ 甲회사의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가진 주주가 정관변경의 건을 제안하여 이사회가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였다면 이사는 그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그 의안의 요령을 기재할 수 있다.
- ㉣ 甲회사가 양수하는 乙회사 영업의 일부가 甲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로써 한다.
- ㉤ 甲회사의 보통주 2만주를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이전에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乙회사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안건에 대하여 주주총회일에 8,000주는 찬성, 12,000주는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8. 상법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중에서 주식매수청구기간이 **다른** 것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함)

- ① 주식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②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③ 회사가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④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때에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영업양수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⑤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9.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통지에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합병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적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단순분할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인적분할의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므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는 분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일정기간 본점에 비치할 의무가 없다.
- ⑤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21. 상법상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전환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판례에 의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⑤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2. 상법상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상장주식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③ 사외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상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7천억원인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회사가 설치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3. 상법상 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합병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출자의무가 없는 사원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합병회사 사원의 입사는 정관기재사항으로서 입사의 시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가 아니라 그 변경내용을 등기한 때로 본다.
- ③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 ④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⑤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지분의 상속도 인정된다.

24.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유한책임회사가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조직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한 때에 한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조직변경된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⑤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병에서와 같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5. 상법상 주식회사에 집행임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집행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한다.
- ②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④ 집행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사를 집행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26.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 및 감자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② 자본금감소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③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자본금감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금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금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룰 수 있다.
- ④ 자본금감소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⑤ 감자무효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와 신주발행유지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신주발행유지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② 신주발행유지청구는 이사가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 ③ 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어야 한다.
- ④ 위법행위유지청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⑤ 위법행위유지청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28.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및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 ③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도 법원에 업무 집행권한의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 ⑤ 유한책임사원은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히 퇴사하지 아니한다.

29.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모집설립을 하는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②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주주총회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기관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이다.
- ⑤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한다.

30. 상법상 주식회사의 서류의 비치와 열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회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회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하고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 ④ 회사채권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합병계약서는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1. 상법상 2014년 12월 12일 설립된 甲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甲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2016년 11월 15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그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③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청약할 수 있으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 ⑤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고 그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고 발행된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32. 상법상 주식회사의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한 경우에도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 ② 회사가 이사의 자격도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락한 경우에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③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자격의 외관 현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④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 ⑤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3. 환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②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만 어음을 절취한 자가 배서를 말소한 경우 그 배서는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③ 어음의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 ④ 무담보배서를 한 배서인은 자신의 피배서인을 포함하여 그 이후의 모든 어음취득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⑤ 입질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4. 수표의 지급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거절하면 수표소지인은 자신의 모든 배서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⑤ 지급보증은 조건없이 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5. A는 B에게 5백만원의 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권을 수여하면서 어음금액과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확정일출급식으로 발행하였고 B는 이를 C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C가 만기 전에 어음금액을 5백만원으로 보충하고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A에 대하여 어음금지급청구를 하면 A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C가 만기 전에 어음금액을 8백만원, 수취인을 B로 보충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D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A는 D에 대하여 어음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C가 A에 대하여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의 변론종결 전에 백지를 전부 보충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④ C가 만기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한 경우 C는 B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C가 어음금액과 수취인란을 보충하는 경우 C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36. 어음의 실질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A가 B에게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어음발행의 원인인 물품대금채무를 자금관계라 한다.
- ② A가 B에게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물품대금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③ A가 B에게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물품대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A는 B에게 어음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A가 B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인지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한 것인지 명시된 합의가 없다면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⑤ A가 B에게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B는 기존채권과 어음채권 중에서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

37.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인수제시를 할 수 없다.
- ② 배서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으면 그 효력이 있다.
- ③ 어음의 지급인이 만기를 변경하여 인수하면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지만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 ④ 어음의 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어음에 지급담당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수제시는 지급인에게 할 수 없고 지급담당자에게 하여야 한다.

38. 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취인과 만기는 환어음의 요건이나 수표의 요건은 아니다.
- ② 환어음의 인수인과 수표의 지급보증인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이다.
- ③ 약속어음과 수표의 발행인은 상환의무자로서 지급담보책임을 진다.
- ④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배서로서 유효하고 지급인이 하는 배서도 유효하다.
- ⑤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지급담당자는 은행에 한한다.

39.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유실된 어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 ② 지시금지어음이 배서가 연속된 경우 그 배서에는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고 그 결과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③ 판례에 의하면 백지어음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입질배서의 경우 피배서인은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 ⑤ 기한후배서의 경우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선의취득도 인정된다.

40. 2017년 12월 20일 A가 B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B→C→D의 순으로 양도되었다. 어음의 만기가 2018년 2월 30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2018년 2월 말일은 28일이며 3월 1일만 공휴일임)

- ① 판례에 의하면 만기가 세력에 없는 날인 2018년 2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어도 어음의 만기로서 유효하다.
- ② D가 A에게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지급을 할 날은 2018년 2월 28일(수)이 된다.
- ③ D가 지급제시함이 없이 2018년 3월 2일(금)에 E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이는 만기후배서이며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④ D가 2018년 3월 2일(금)에 어음교환소에서 어음의 지급제시를 한 경우 이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⑤ A가 D에게 2018년 2월 12일(월)에 어음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D는 어음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고 D가 이를 거절하면 수령지체가 된다.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1.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이다.
-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루어진다.
- ③ 10억원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사기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5년의 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⑤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④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 ⑤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사업양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상 과세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전자신고 제외)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②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시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
- ③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2017년 2월 5일)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 ⑤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증여세 관할세무서장이 갑의 토지(A)를 압류하여 2018년 12월 10일 180,000,000원에 매각하고 체납처분비 10,000,000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 (1) 증여세와 그 가산금: 50,000,000원
(갑은 토지(A)를 2016년 6월 1일에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관할세무서장은 갑에게 2017년 6월 5일에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갑은 이를 체납함)
- (2) 대한은행 대출금: 60,000,000원
(2018년 7월 5일 토지(A)에 저당권이 설정됨)
- (3) 갑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 최종 3월분 임금채권: 10,000,000원
- 기타 임금채권: 20,000,000원
- (4) 부가가치세: 100,000,000원
(2018년 7월 15일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함)
- (5) 부가가치세 관할세무서장은 토지(A) 매각대금에 대해 증여세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의 교부를 청구함

- ① 0원 ② 30,000,000원 ③ 50,000,000원
- ④ 90,000,000원 ⑤ 100,000,000원

5.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③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 ④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 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주)B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 (1) 2015년 5월 1일에 (주)A는 내국법인 (주)B의 주식 11,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시가인 주당 20,000원에 취득하였다.
 - (2) (주)A가 제17기에 (주)B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해 수령한 무상주 4,000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자본전입결의일 | 무상주 | 잉여금 자본전입의 재원 |
|-------------|--------|-------------------------|
| 2017년 7월 1일 | 3,000주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건물의 재평가적립금 |
| 2017년 9월 1일 | 1,000주 | 자기주식처분이익 |
- (3) 2018년 2월 1일(감사결의일)에 (주)B가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주)A는 보유주식 2,000주를 반환하고, 주당 20,000원의 현금을 감자대가로 수령하였다.
 - (4) (주)B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없다.

- ① 40,000,000원 ② 35,000,000원 ③ 21,250,000원
- ④ 10,000,000원 ⑤ 2,500,000원

세법개론

7.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 ~ 2018.12.31.) 업무용승용차(B)의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18기말 업무용승용차(B)와 관련된 유보잔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2018년 1월 1일에 임원 전용 업무용승용차(B)*를 12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제18기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함

(2) 제18기 손익계산서상 업무용승용차(B) 관련비용

구분	금액
감가상각비	20,000,000원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4,000,000원
합계	24,000,000원

(3) 회사는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였으며,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용승용차(B)의 업무사용비율은 90%이다.

(4)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이다.

(5) 회사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 ① (-)4,000,000원 ② 9,600,000원 ③ 10,000,000원
- ④ 12,400,000원 ⑤ 13,600,000원

8.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회계처리 내역이다. 제18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하여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복도에 항상 전시하기 위해 미술품 1점을 1천만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다.
- ② 채무 1억원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액면가액 5천만원, 시가 7천만원)을 발행하고,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인 5천만원을 주식발행초과금(자본)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③ 당기 중 금형을 1천만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하였다.
- ④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를 보유한 출자임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5백만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하였다.
- ⑤ 단기금융자산을 1억원에 매입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 1천만원을 포함한 1억 1천만원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다.

9. 지주회사가 아닌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회사는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주)갑과 (주)을로부터 수입배당금 11,000,000원을 수령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배당지급법인	현금배당금	보유주식취득가액*	지분율	주식취득일
(주)갑	10,000,000원**	10억원 (적수는 3,650억원)	60%	2017년 9월 5일
(주)을	1,000,000원**	20억원 (적수는 7,300억원)	70%	2017년 6월 5일

*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으로 제18기 중 보유주식변동은 없음
** 배당기준일: 2017년 12월 31일, 배당결의일: 2018년 1월 20일

(2) (주)갑과 (주)을은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3) (주)A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은 100억원(적수는 36,500억원)이다.

(4) 제18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자비용	이자율
회사채 이자	12,000,000원	10%
연지급수입의 지급이자	5,000,000원	1%
은행차입금 이자***	20,000,000원	10%
합계	37,000,000원	

*** 제18기말 현재 건설 중인 본사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 이자

(5) 지분율 50% 초과 100% 미만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50%

- ① 4,400,000원 ② 4,150,000원 ③ 3,800,000원
- ④ 3,700,000원 ⑤ 3,150,000원

10.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접대비, 기부금 및 지급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실제로 접대행위를 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대금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한다.
- ② 기부금 한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해 산출하며, 접대비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일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 ③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000,000원(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된 금액 418,000원 포함)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1,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 ④ 지진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해 장부가액 3억원, 시가 5억원인 상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현물기부금의 가액은 3억원으로 한다.
- ⑤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령하였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이 출자임원(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 ②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 ③ 비출자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는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과 매출액 비율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분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분담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 ⑤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세법개론

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 및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A가 2018년 3월 1일에 파산한 (주)C의 주식을 2018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주)A와 (주)C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주)C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보유한 모든 외화자산·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③ (주)A에게 적용되는 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가 5년일 때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기계장치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2년과 5년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로 할 수 있다.
- ④ 2018년 7월 2일에 취득 즉시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7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때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 ⑤ 제18기부터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적법하게 신고)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할 경우, 회사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2019년 3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기부금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18기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 (1) (주)A의 제18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비용은 각각 100,000,000원과 10,000,000원이다.
- (2) 제18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부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국방헌금: 5,000,000원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 12,000,000원
- (3) 2018년 4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로부터 시가 100,000,000원인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0,000,000원에 고가 매입*하고, 장부에 매입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 (4) 제16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7,000,000원이 있다.
- (5) 제17기 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10,000,000원이 있다.

- ① 500,000원 ② 1,500,000원 ③ 2,500,000원
- ④ 2,800,000원 ⑤ 3,500,000원

1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기계장치(B)의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이다. 제18기말 기계장치(B)의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으로 옳은 것은?

- (1) 2016년 1월 1일에 기계장치(B)를 시가인 30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금액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 (2) 2017년 7월 1일에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2,000,000원을 기계장치(B)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였다.

- (3)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B)의 감가상각누계액은 280,000,000원이다.
- (4) 기계장치(B)의 제18기초 상각부인액누계는 5,600,000원이다.
- (5) 기계장치(B)와 관련하여 제18기에 22,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 (6) 회사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액법 상각률은 0.5, 정률법 상각률은 0.7로 가정한다.
- (7) 회사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30,280,000원 ② 15,100,000원 ③ 4,080,000원
- ④ 2,680,000원 ⑤ 1,000원

15.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료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③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에 한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 ⑤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6.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제18기의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으로 옳은 것은?

(1) 제18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당기상계액	5,000,000	기초잔액	2,000,000
기말잔액	?	당기설정액	?

(2) 당기상계액은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던 어음 2매(각 거래처별 발행금액: 2,500,000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결산서상 대손충당금과 상제한 것이다.

(3) 제17기말 현재 대손부인액(전액 미수금입)은 3,000,000원이고 그 중 1,000,000원은 당기 중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제18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매출채권 500,000,000원, 미수금 100,000,000원이다.

(5) 제18기말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4,667,000원이다.

(6) 제18기의 대손실적률은 1%이며,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 ① 10,686,020원 ② 10,687,020원 ③ 10,688,020원
- ④ 11,688,020원 ⑤ 11,689,020원

세법개론

17.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사택 제공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한 세무조정이 제18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 (1) (주)A는 출자임원(소액주주 아님) B씨에게 제17기부터 사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택의 시가는 200,000,000원이며 B씨로부터 보증금 4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임대료로 매월말 200,000원을 수령하고 동 임대료를 임대료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2) (주)A는 출자임원(소액주주 아님) C씨에게 제16기부터 사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택의 시가는 120,000,000원이며 C씨로부터 임대료로 매월말 240,000원을 수령하고 동 임대료를 임대료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3) 사택의 제공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다.
-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5%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600,000원 ② (+)720,000원 ③ (+)800,000원
- ④ (+)820,000원 ⑤ (+)900,000원

18.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세에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 포함되며,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액은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다.
- ④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⑤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을 받음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9. 다음은 비영리내국법인 A(「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임)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관련된 자료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최대 손금산입 범위액으로 옳은 것은?

- (1) 제18기 A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300,000,000원이다.
- (2) 제18기 A의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소득(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이자소득*	80,000,000원
배당소득**	20,000,000원
사업소득***	90,000,000원

- * 이자소득은 정기예금이자이다.
- ** 배당소득은 내국법인 (주)B로부터 받은 배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동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다.
- *** 사업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였다.
- (3) 제16기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0,000,000원이 있다.
- (4)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 ① 124,000,000원 ② 140,000,000원 ③ 164,000,000원
- ④ 180,000,000원 ⑤ 196,000,000원

20. 거주자 갑의 2018년 국내발생 소득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갑의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1) 2018년 5월 31일에 지급받은 저축성보험의 만기보험금: 100,000,000원 (3년 전 납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총 납입보험료는 88,000,000원임)
- (2) 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배상금(계약금이 배상금으로 대체됨): 25,000,000원
- (3) 내국법인이 2017년 3월 1일에 발행한 채권을 발행일에 취득한 후 만기 전인 2018년 2월 1일에 중도 매도함에 따른 매매차익: 40,000,000원(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 10,000,000원 포함)
- (4) 「공익신탁법」에 따른 학술관련 공익신탁으로 받은 이자: 3,000,000원
- (5) 2018년초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원금 40,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4,000,000원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2018년 11월 1일에 42,0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과세표준확정 신고 전에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됨

- ① 24,000,000원 ② 29,000,000원 ③ 32,000,000원
- ④ 34,000,000원 ⑤ 64,000,000원

21. 다음 중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②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 ③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④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소득
- ⑤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22. 다음은 국내에서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 갑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2018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2018년 손익계산서

(단위: 원)

I. 매출액		600,000,000
II. 매출원가		380,000,000
III. 매출충이익		220,000,000
IV. 판매비 및 관리비		
1. 급여	42,000,000	
2. 접대비	40,000,000	
3. 보험료	4,500,000	86,500,000
V. 영업이익		133,500,000
VI. 영업외수익		
1. 배당금수익	6,000,000	6,000,000
VII. 영업외비용		0
VIII. 소득세차감전순이익		139,500,000
IX. 소득세비용		15,000,000
X. 당기순이익		124,500,000

(2) 추가자료

- 제조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1개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없다.
- 급여는 대표자인 갑의 급여 20,000,000원, 같은 사업장의 경리로 근무하는 을(갑의 아들)의 급여 15,000,000원, 일용근로자의 급여 7,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접대비는 모두 업무용 사용분으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것이다.
- 보험료는 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2,000,000원과 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2,500,000원의 합계이다.
- 배당금수익은 대표자 갑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이다.
- 소득세비용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이며 이월 결손금은 없다.
-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 ① 143,800,000원 ② 156,300,000원 ③ 168,300,000원
 ④ 174,300,000원 ⑤ 188,500,000원

23. 다음은 2017년 1월 1일에 (주)A에 입사한 생산직근로자(공장에서 금속 용접 업무 담당)인 거주자 갑의 2018년 급여 내역이다. 갑의 2018년 귀속 총급여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총급여액은 24,000,000원이다.

- (1) 급여: 12,000,000원(월 1,000,000원×12개월)
 (2) 상여금: 4,000,000원(부정기적인 수령임)
 (3) 자가운전보조금: 3,000,000원(월 250,000원×12개월)
 - 갑 소유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회사의 사규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임

- (4) 작업복: 150,000원
 - 작업에 필요하여 지급받은 작업복의 금액임
 (5) 식사대: 1,200,000원(월 100,000원×12개월)
 - 회사는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지급된 식사대임
 (6) 자녀보육수당: 3,600,000원(월 300,000원×12개월)
 - 5세인 자녀 보육과 관련된 수당임
 (7) 연장근로수당: 1,500,000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더한 지급액임

- ① 19,000,000원 ② 20,200,000원 ③ 20,500,000원
 ④ 21,400,000원 ⑤ 21,850,000원

24.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분배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이를 공제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으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③ 거주자가 채권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매도하는 거주자가 자신의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⑤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5.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②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③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는 연금외수령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④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세법개론

26.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8년 종합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2018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1) 과세대상 소득명세

가. 상장 내국법인(고배당기업 아님)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15,000,000원
*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을 재원으로 이루어진 배당임

나. 국내은행의 정기예금으로부터 받은 이자 15,000,000원

다.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이익 10,000,000원

라. 사업소득금액 2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 5,000,000원

(3)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24%

- ① 8,620,000원 ② 7,870,000원 ③ 7,217,500원
- ④ 5,635,000원 ⑤ 4,720,000원

27. 종합소득의 신고,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종합소득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④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자는 제외)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⑤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여성)의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

관계	연령	소득	비고
본인	40세	근로소득금액 28,000,000원	
부친	72세	없음	2018년 10월 31일 사망
모친	70세	기타소득금액 4,000,000원	
남편	44세	총급여액 4,500,000원	
아들	6세	없음	
동생	38세	없음	장애인

(2) 본인과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3)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 ① 9,000,000원 ② 9,500,000원 ③ 10,500,000원
- ④ 11,000,000원 ⑤ 12,500,000원

29. 거주자 갑은 2015년 6월 5일에 국내 토지를 시가 800,000,000원에 취득하고 즉시 등기를 하였다. 이후 갑은 A은행에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300,000,000원을 차입하였다. 2018년 9월 8일에 거주자 을(갑과 특수관계 없음)은 A은행 차입금 30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갑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았다. 다음의 추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갑의 2018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갑의 증여당시 토지의 시가: 1,500,000,000원

(2) 토지와 관련한 자본적지출액: 24,000,000원(적격 증명서류 수취·보관함)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

(4) 2018년 갑의 양도소득 과세거리는 상기 토지 외에는 없었다.

(5) 을의 차입금 인수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을이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 ① 42,500,000원 ② 114,500,000원 ③ 116,500,000원
- ④ 119,180,000원 ⑤ 121,680,000원

30.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상속재산인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한 경우
- ②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운동화를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경우
- ③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은 경우
- ④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은 경우
- ⑤ 장난감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여한 장난감의 망실에 대하여 변상금을 받은 경우

31. 건물 1채를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 사업자 갑이 2018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에 제시된 금액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 갑은 보유건물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건물은 단층이며 도시지역 내에 있다.
 가. 상가의 임대면적은 40m²이고, 주택의 임대면적은 50m²이며, 건물의 부수토지는 750m²이다.
 나. 보증금은 91,250,000원, 월임대료는 1,500,000원, 월관리비는 300,000원이며 월임대료 및 월관리비(공공요금 등의 징수대행이 아님)는 매월말에 수령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
 (2)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의 기준시가는 100,000,000원이며 토지의 기준시가는 400,000,000원이다.

- ① 1,571,040원 ② 1,859,040원 ③ 2,478,720원
- ④ 3,098,400원 ⑤ 3,614,800원

3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내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수령한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자인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③ 외국에서 수입한 관상용 거북이는 면세대상 재화이다.
- ④ 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대상이다.
- 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3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컴퓨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K가 2018년 제1기 예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K는 주사업장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니고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 2018년 1월 4일: (주)B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판매대금 2,000,000원은 (주)K의 상품권(2017년 12월 25일에 판매한 것임)으로 받았다.
 (2) 2018년 1월 25일: 업무에 사용하던 승용차(매입시 매입세액불공제)를 임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2017년 2월 15일 취득시 취득가액 20,000,000원, 이전 당시 장부가액 8,000,000원).
 (3) 2018년 2월 5일: 미국의 거래처인 (주)C와 2018년 1월 20일에 제품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2월 5일에 선적하였다. 수출대금 50,000달러 중 계약금으로 수령한 30,000달러를 2018년 1월 25일에 환가하였고, 잔금 20,000달러는 2018년 4월 10일에 회수하였다.

일 자	구 분	기준환율
2018년 1월 20일	수출계약체결일	900원/달러
2018년 1월 25일	환가일	950원/달러
2018년 2월 5일	선적일	1,000원/달러
2018년 3월 31일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1,100원/달러
2018년 4월 10일	잔금회수일	1,050원/달러

- (4) 2018년 2월 15일: (주)D에게 제품을 17,000,000원에 판매하고 인도하였으며, 대금은 2018년 5월 15일에 받기로 하였다.
- (5) 2018년 3월 3일: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직매장으로 반출하였다(취득가액은 5,000,000원,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는 내부규정에 의한 반출가액은 6,000,000원, 반출시 시가는 7,000,000원).
- (6) 2018년 3월 20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품을 협찬하였다(원가 2,000,000원, 시가 2,500,000원).

- ① 73,500,000원 ② 74,500,000원 ③ 75,000,000원
- ④ 83,500,000원 ⑤ 86,000,000원

34.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②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기 중에 매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 ④ 2018년 6월 25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2018년 7월 15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도매업자가 2018년 6월 28일에 매입한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⑤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감가상각대상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35.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탁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② 공급시기가 2018년 8월 25일인 재화의 공급대가를 2018년 7월 25일에 수령한 경우 2018년 7월 2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간이과세자는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④ 사업자는 15일 단위로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⑤ 미용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법개론

36.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모두 판매하는 일반과세자인 소매업자 (주)D의 201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대한 제1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며, 2018년 제1기 확정신고 이전의 모든 신고·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1) 2017년 7월 10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품(A)를 30,000,000원에 구입하였고 실지귀속을 알 수 없다.

(2) 2018년 5월 20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품(B)를 10,000,000원에 구입하였고 실지귀속을 알 수 없다.

(3) 공급가액의 내역

구분	과세	면세
2017년 7월 ~ 9월	30,000,000원	70,000,000원
2017년 10월 ~ 12월	45,000,000원	55,000,000원
2018년 1월 ~ 3월	30,000,000원	50,000,000원
2018년 4월 ~ 6월	60,000,000원	40,000,000원

(4) 매입세액의 내역

구분	과세	면세	공통
2017년 7월 ~ 9월	3,000,000원	4,000,000원	3,000,000원*
2017년 10월 ~ 12월	1,500,000원	2,000,000원	-
2018년 1월 ~ 3월	1,800,000원	1,200,000원	-
2018년 4월 ~ 6월	4,000,000원	3,000,000원	1,000,000원**

* 비품(A)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임
** 비품(B)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임

- ① 1,625,000원 ② 1,493,750원 ③ 1,218,750원
- ④ 1,108,750원 ⑤ 1,050,000원

37.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및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업종에 구분없이 그 발급금액에 동일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 ② 일반과세자 중 사업장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한도없이 그 발급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한다.
-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④ (주)A가 생산한 제품인 보온병을 직원에게 기념품으로 무상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의 과세사업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 ④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 ⑤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5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9. 거주자 갑은 2018년 4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재산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주 택*	2,000,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갑의 동거가족은 다음과 같다(배우자는 없음).

대상	연령	비고
모친	70세	기대여명 20년, 장애인임
장남	21세	
장녀	9세	

(3) 갑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비 5,000,000원이 발생하였다(봉안시설이용료 및 자연장지사용관련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음).

(4)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400,000,000원 ② 545,000,000원 ③ 845,000,000원
- ④ 995,000,000원 ⑤ 1,000,000,000원

40. 「지방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취득자의 주소지이므로 부동산 소재지와 취득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취득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
- ②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 ⑤ 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